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주요 내용

- ▣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이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됨으로써 26일 입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되면 공식적으로 아베 시대가 열리게 됨.
- ▣ 아베 총리후보는 2006년 7월 발간된 자신의 저서와 9월 1일 총재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정권구상에서 공급중시(supply-side)의 경제정책노선을 표방하였음.
 - 그의 경제정책노선은 개방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과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 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개방→기술혁신→잠재성장률 향상→고성장」 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 이러한 아베의 공급중시 경제정책노선 하에서 전통적인 재정·금융 정책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재정건전화의 기조 하에서 정부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정책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 것임.
 - 성장중시 전략은 추가 금리인상과 같은 금융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디플레이션 탈출이 공식 선언될 경우 금리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아베의 정책구상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각료가 인선된 후 각 정책사항의 추진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 신내각 구성은 차기 총리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난관이 될 것임.
 - 세출삭감만으로는 재정재건의 실현이 어려우므로, 소비세 인상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임. 또한 세출삭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정책간 상충 및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해소해야 함.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마무리도 중요함.

1. 개요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9월 20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경쟁자인 아소 타로(麻生太郎) 외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장관을 물리치고 높은 지지율로 당선됨에 따라 아베 시대가 열리게 됨.
-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 아베 후보가 464표(66%), 아소 후보가 136표, 다니가키 후보가 102표를 획득함.
- 일본에서는 관례적으로 여당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는바, 아베 후보가 9월 26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될 경우 일본의 제90대 총리가 됨.

표 1. 일본의 주요 정치 일정

시기	주요 일정
06년 9월 2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각료 선임
10월 22일	중의원 보궐 선거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
12월 11~13일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07년 4월	지방선거
7월	참의원 선거

자료: 『朝日新聞』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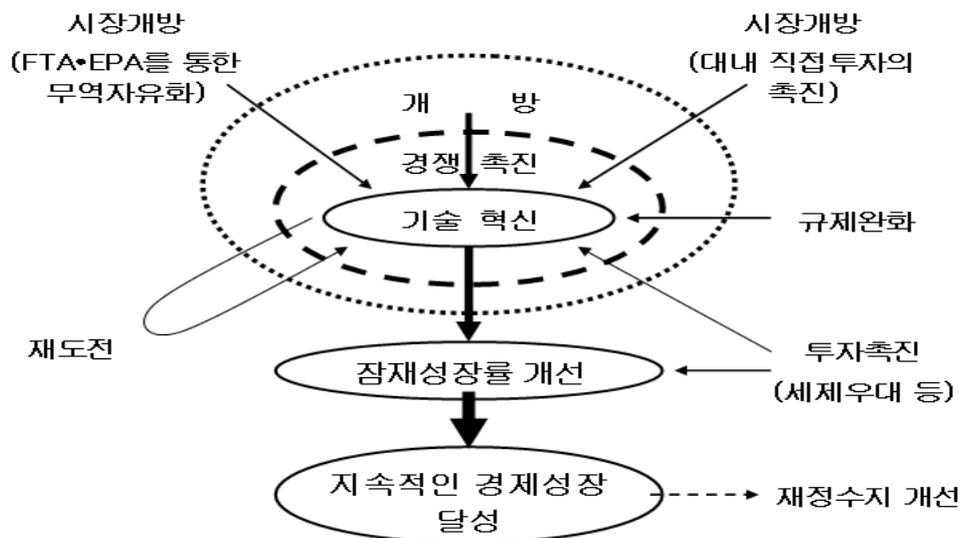
- 현재 일본경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있는 재정을 재건하고 경제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다음에서는 2006년 7월에 발간된 아베 총리후보의 저서(『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와 9월 1일 총재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정권구상을 중심으로 아베의 경제정책 노선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2. 아베의 경제정책 노선과 전망

경제정책 노선: 성장-재도전지원間 조화

- 아베 총리후보의 경제정책 노선은 개방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과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재도전 지원’ 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위해 「개방 → 기술혁신 → 잠재성장률 향상 → 고성장」의 전략을 채택함.
- 이것은 공급능력 제고와 경제주체의 유인을 강조하는 공급중시(supply-side)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정권구상의 메시지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방’ 이라는 용어로 시장개방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쟁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재도전 지원’ 을 통해 공급중시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음.

그림 1. 아베 총리후보의 경제정책 요점



자료: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2006. 9. 12)

성장전략: 개방과 기술혁신

- 아베 총리후보는 9월 1일 제시한 정책구상(「새로운 나라 만들기」)에서 “성장 없이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 고 하면서 **성장우선주의**를 표방함.

- 아베 후보의 정책구상은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노선을 계승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개혁 없이는 성장이 없다” 는 고이즈미의 노선에 대해 아베 후보는 “성장 없이는 미래가 없다” 로 차별화하면서 성장중시 전략을 채택함.

- 아베 후보는 이러한 성장중시 전략을 위한 처방전으로서 ‘개방과 기술혁신’ 을 제시하고 있음.

① 개방

- 아베 총리후보가 제시한 ‘개방’ 은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연대협정(EPA)에 의한 무역자유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대일 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장개방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쟁을 유발하여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무역자유화 확대

- 일본이 시장개방을 통해 성장력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간다면, 일본 기업은 폭넓은 해외진출로 아시아의 성장력을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아베 후보는 자신의 저서(『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저출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겠지만,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 세계의 소비자를 상대로 국내 수요하락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의 성장 중심인 아시아를 시장으로 하게 되면 국내의 저출산도 약점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함.

■ 대일 직접투자 촉진

- 아베 후보는 “대일 직접투자가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개방해나가 고자 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본의 금융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개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음.¹⁾
- ‘런던, 뉴욕에 견줄 수 있는 일본의 금융시장 육성’ 을 제시함(9월 1일 정권구상).

■ 규제완화

- 규제완화는 기업간 경쟁을 유발하여 기술혁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의 의미를 가짐.

② 기술혁신

- 또한 아베 후보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투입량이 둔화되더라도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아베 후보는 특히 2000년경에 유행한 ‘IT 혁명’ 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일본은 아직 성장의 여지가 있다. 향후 IT와 로봇의 활용에 의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면 기술혁신의 성과에 의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프트 및 하드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음(『아름다운 나라로』).
- ‘최첨단산업의 R&D 및 중소기업 강력 지원’ 이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함(9월 1일 정권구상).

재도전 지원

- 재도전 지원은 아베의 경제정책 노선에서 성장중시와 함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음.

1) 藤田勉(2006), 『安倍晋三の経済政策を読む』, インデック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九月.

- 이것은 공급중시 경제정책의 취약점인 경쟁의 부작용(즉 도태)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
- “사회적 격차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한 고이즈미 총리와는 달리 경쟁에 기초한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재도전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함(『아름다운 나라로』).²⁾
- ‘여성과 고령자 등의 보다 적극적인 고용 촉진’, ‘재택근무 인구 확대’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함(9월 1일 정권구상).
- 재도전 지원은 사회적 패자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즉 패자부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향후 기업의 협력 여부가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임.

경제정책 전망: 재정·금융정책, 외환시장

■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기조 하에서 2007년도 예산에서 신규국채발행 총액은 2006년도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년 연속 30조엔 이하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수요관리 차원의 재정정책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금융정책

- 성장중시 전략은 추가 금리인상과 같은 금융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아베 후보는 9월 6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적인 환경을 유지할 방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 밝혀 저금리기조 유지를 희망함.
-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된 현실 하에서 일본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음.

2) ‘재도전 지원’이라는 아이디어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후보가 제안한 ‘온정적인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라는 슬로건과 유사함. 이 슬로건은 9.11 이후 부시 정권이 강경 노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지만, 당시 대선에서 중요한 키워드였음.

- 이와 관련하여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로 전환될 경우, 아베 후보가 일본경제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금리인상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된 바 있음(『로이터 통신』 9월 6~7일).

■ 외환시장

- 엔화 환율은 세출삭감의 재정긴축 노선 및 저금리기조의 지속 등의 국내 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상승(円低)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추가 금리인상 등 하락(円高) 요인을 감안할 경우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엔화 환율은 2006년 5월 17일 달러당 109.23엔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9월 20일 현재 117엔대를 기록하고 있음.

3. 향후 과제

- 아베 후보의 정책노선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바, 앞으로 새로운 각료가 인선된 후 각 정책사항의 추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내각 구성은 차기 총리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내용은 총재 선거 후에 명확히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IT 투자감세안,³⁾ 금리인상효과를 통한 소비확대방안⁴⁾ 등이 대두된 바 있음(『로이터 통신』 9월 12일).
- Morgan Stanley社는 아베 후보가 17명의 각료 가운데 민간에서 4명 이상을 기용할 경우 상당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평가함.⁵⁾

3)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3~05년간 5천억 엔 규모의 IT 투자감세를 실시하여 2조 엔의 경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아베 측에서는 같은 규모의 투자감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일본내 예·저금의 합계가 750조 엔이므로 금리가 1% 상승하면 7.5조 엔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금리인상효과를 통한 소비확대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5) 「Weekly International Briefing」(2006. 8. 15), Morgan Stanley社.

- 그러나 아베 후보가 당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경제각료에 보수적인 인사를 선임할 경우 개혁이 후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Credit Suisse社의 白川浩道 선임연구원, 『로이터 통신』 8월 25일).

■ 소비세 인상 논란의 조기 종식

- 9월 1일 정책구상에서는 재정재건 이슈와 관련하여 “소비세 인상 등을 비롯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세제개혁 추진”을 언급했으나, 소비세의 인상 폭, 시기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밝히지 않음.
- 그러나 세출삭감만으로 재정재건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 확보가 급선무이므로 소비세 논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간 상충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 해소

- 예컨대 세출삭감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간 경제격차 확대, 2007년 선거를 앞둔 정치정세 등에 따라 공공사업비 삭감, 지방교부세 억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음. 외무성도 정부개발원조(ODA)의 삭감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재도전 지원과 같은 격차 해소에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되므로 재정건전화 일정엔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함.

- 고이즈미 정권이 시작한 개혁의 성패 여부는 차기 정권의 정책 운영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임. 예컨대 우정민영화, 도로개혁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남아 있음.